

학생회 감사 결과 발표, 주의·경고 잇따라

중앙감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 트랙·학과(부) 학생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 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 8월 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의 29건, 경고 1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용환(컴공 3) 중앙감사위원장은 “검토 방식을 개선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해 처분보다 예방 중심의 감사 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감사 시행 세칙에 따르면 중앙감사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공약감사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징계수위는 주의와 경고로 나뉘며 주의 2회가 누적될 경우는 경고 1회로 환산된다. 경고가 2회인 경우에 학생회비의 1%를 환불 조치하며 경고가 1회 증가할 때마다 2%씩 환불액이 증가하게 된다. 주의는 학생회비 사용의 적절성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여된다.

중운위 감사 결과,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참여명단 양식 오용’으로 주의 1회를 받았다.

총학은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윤지(문문 4) 총학생회장은 “명단 작성 양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IT공과대학(이하 공대)이 ‘사업평가서 중앙감사위원회 직인 누락’으로 총 3회의 주의를 통보받았다.

공대 측은 서류 작성 및 검수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동현(산공 3) 공대 정학생회장은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검수를 통해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소속 트랙 및 학과 학생회의 경우 회화과에서 ‘수기명단 조작’으로 경고 1회를 부여받았다.

이에 회화과 학생회는 1차 감사 이후 서류 수정 및 보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예진(서양화 3) 회화과 정학생회장은 “MT사업 진행 이후 ‘MT 상품 수령 명단’이 누락 된 것을 확인했고 해당 사안이 1차 감사에 반영됐다”며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에 어긋나는 서류 작성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소속 트랙 및 학과 학생회의 경우 국제무역트랙과 글로벌비즈니스트랙이 ▲참여명단 필수항목 누락 ▲학생회원 특혜 ▲지출 타당성 미비로 각 주의 1회를 받았으며 ‘학생회비 납부 해택 누락’과 ‘참여명단 일부 누락’을 이유로 경고 2회와 변상금을 통보받았다. 부동산트랙에서는 ‘금전수령증 오작성’으로 주의 1회가 내려졌다. 기업경영트랙과 회계재무경영트랙은 ‘참가비 과채정’으로 경고 1회를 부여받았다.

국제무역트랙과 글로벌비즈니스트랙 학생회 측은 이번 감사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별도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주은영(사회과학 3) 기업경영트랙 트랙장은 “다른 트랙의 이전 연합MT 비용을 참고해 예산을 책정했으나 예상보다 지출이 적었다”며 “MT 진행 후 잔여 참여비는 연합MT를 진행한 기업경영트랙과 회계재무경영트랙 두 학생회의 통장으로 귀속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트랙 학생회는 금전수령증 작성 과정에서 ‘임금자명의 오기입’으로 주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다은(사회과학 3) 부동산트랙 트랙장은 “금전수령증을 작성할 때 총학의 이름을 ‘온’이 아닌 ‘백’으로 잘못 기입했다”며 “앞으로는 감사 파일 제출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재(사회과학 3) 회계재무경영트랙 트랙장은 “연합MT 과정에서 예산을 높게 책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예산 운영 과정에서의

변수를 예상치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디자인대학 소속 학과 및 트랙에서는 글로벌패션산업학부가 ‘사업평가 중앙감사위원회 직인 누락’으로 주의 3회를 부여받았다.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학생회는 업무상의 착오로 직인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목(패션 3)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정학생회장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후 동일한 사유의 징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계전자공학부는 ▲사업평가서 중앙감사위원회 직인 누락 ▲학생회비 납부 해택 누락 ▲사업 규모 오책정 및 과지출 ▲잔여물품 처분 근거 미비로 주의 4회와 변상금을 통보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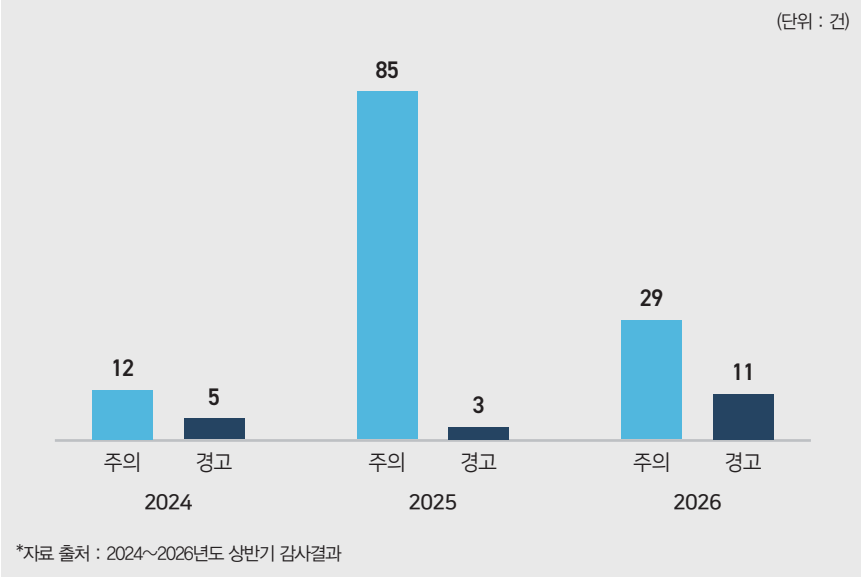
기계전자공학부 학생회는 업무 과정에서 의 오류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심규승(기계전자 3) 기계전자공학부 정학생회장은 앞으로의 보완 계획에 대해 “향후 업무를 처리할 경우 더욱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의융합대학 학과(부) 학생회에서는 융합보안학과가 ▲사업계획서 중앙감사위원회 직인 누락 ▲사업평가서 중앙감사위원회 직인 누락 ▲명단 양식 미준수로 주의 3회를 받았다. 미래모빌리티학과는 ▲참가비 책정 근거 미비 ▲참여명단 일부 누락 ▲수정사항 미반영 ▲사업계획서 중앙감사위원회 직인 누락 ▲사업평가서 중앙감사위원회 직인 누락 ▲양식 미준수 ▲수기명단 조작 ▲회계장부 불일치 ▲영수증 누락 등으로 주의 7회와 경고 4회를 부여받았으며 변상금도 통보받았다.

융합보안학과 학생회 측은 이번 감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준호(미래모빌리티 2) 미래모빌리티학과 정학생회장은 “미래모빌리티학과는 신

3개년 상반기 학생회 감사 주의 및 경고 건수



생 학과이고 학생회도 올해 처음으로 생겼다”며 “재선거로 당선돼 감사OT에도 참여하지 못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들에 대한 교육이 단순 안내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회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래플러스대학(이하 미플대) 소속 학과인 ICT융합디자인학부는 ‘참여명단 양식 오용’으로 주의 1회를 받았다. ICT융합디자인학부 학생회는 미플대 특성상 온라인 명부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 이 과정에서 총대가 제공한 참여 명단 양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림(미플 4) ICT융합디자인학부 정학생회장은 “현실적으로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형식보다 예산의 사용처를 따지는 감사의 본질적 목적에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생회 감사 결과에 대해 중앙감사위원장은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용환 위원장은 “단순 오기입이나 서식

미비 등으로 인한 주의 처분이 작년 85회에서 29회로 65% 이상 감소했다”며 “각 학생자치기구가 회계 기본 서류를 갖추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총학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감사는 학생회비가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회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감사 관련 업무를 맡은 총대는 학생자치기구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감사 진행 전 학생자치기구들에 많은 자료와 서식을 배포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시 1:1 질의응답을 진행했다”며 “재선거 기구들에게도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우들의 권익을 지키고 신뢰받는 학생자치 환경 조성을 위해 맡은 바를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계약학과 운영규정 학생 보호 방향으로 개정돼

『계약학과 운영규정』이 지난 7월 1일 개정됐다. ▲입학 자격 구체화 ▲학적 유지 조건 완화 ▲재직 여부 확인 절차 정비 ▲준용규정 명문화 등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본고 규정에 반영해 계약학과 학생을 보호하고 재직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4월 본고 계약학과인 뷰티매니지먼트학과 재학생이 산업체 재직 당시 ▲시간 외 근무 ▲임금 체불 ▲등록금 상납 요구 ▲폭언과 부당 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이며, 대학본부는 교육부의 중간 점검 사항에 대한 추가 범리를 검토하고 있다.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5조에서 계약학과 입학 자격 확인을 위해 산업체가 추천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추가됐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협약을 맺은 산업체의 재직자가 대학에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학과다. 기존에는 산업체의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산업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등을 통해 입학 자격을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고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개정됐다. 최윤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확인 서류 종류를 본고 규정에 반영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제17조 제3항의 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적 유지 조건이 개정됐다. 기존의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 불가 지역으로의 전근 등에 더해 ▲성적 과롭힘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사유 ▲산업체의 불합리한 행위 등이 학적 유지 조건으로 세분화됐다. 송인성(미래플러스대학 교학팀) 팀장은 “자진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학생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학적 취득 기준을 담은 제17조 제4항은 삭제됐다. 기존에는 퇴사 후 학위를 유지하려면 졸업 필요 학점의 2분의 1 이상 이수해야 했다.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로 동종업계에 취업해야 했다. 해당 규정이 삭제되며 17조 3항의 학적 유지 조건만 충족하면 재학이 가능해졌다. 최 팀장은 “학생 보호 여부를 퇴직 사유의 불가피성과 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직 사실 확인 방식을 규정한 제18조 제1항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매 학기 재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최 팀장은 “고용관계 확인과 재직 여부 확인의 목적을 구분해 서류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제20조 제2항의 준용규정도 세분화됐다. 본래 준용규정은 ‘관련 법령’으로만 명시돼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법 시행령』, 교육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이 준용규정에 포함됐다. 최 팀장은 “새로운 권한이나 의무가 아닌 기존에 준용해 오던 규정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규정 해석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과 교육부 기준에 따라 학생 보호와 대학의 관리 책임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재직 확인 절차와 준용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모두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했다”며 “계약학과 의 공정한 운영과 학생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원천징수영수증 : 기업 등의 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정리한 문서

유가은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한성대신문

한 걸음 더 가까이
독자에게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하 학위수여식)이 지난 21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문동후 이사장, 이창원 총장, 장명희 교학부총장, 김지현 대외협력부총장 등 교내 인사와 학위수여자가 참석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부 487명, 석사 123명, 박사 20명, 콘텐츠디자인칼리지 41명 등 671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에서는 ▲이사장상 1명 ▲성적 최우수상 2명 ▲공로상 1명 ▲한성인재인증서 1명 ▲동문회장상 1명 ▲기업은행장상 1명 등 총 7명의 수상자가 있었다. 대학원에서는 ▲최우수논문상 2명 ▲우수논문상 8명 ▲공로상 24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1명 등 총 35명에게 수상이 이뤄졌다. 콘텐츠디자인칼리지에서는 ▲성적우수상 1명이 수상했다. 성적 최우수상을 받은 강민서(문과 4) 졸업생은 "항상 강의실 앞쪽에 앉아 필기를 꼼꼼하게 했다"며 "시험 직전에 온라인 강의를 유심히 시청하고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챙겼다"고 전했다.

유가는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본교 일반·기술직 정원 120명으로 확대

본교 일반·기술직 정원이 지난 6월 19일 120명으로 증원됐다. 기존 100명에서 20명 늘어난 숫자다. 이번 증원은 인력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고, 대학의 행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윤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행정 업무와 인력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증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채용 규모와 시기는 업무량과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결정된다. 현재 2026학년도 하반기 직원 채용을 통해 11명을 추가로 임용한 상태다. 향후 매년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분야와 규모를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

증원을 통해 불편이 제기됐던 행정 처리 과정에도 개선이 이뤄진다. 채용 분야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업무 효율과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며 업무 절차와 방식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최 팀장은 "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증원은 2035년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확대된 인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증원 효과를 검증하려는 취지다. 최 팀장은 "향후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내외 환경 변화, 행정 수요 등을 파악해 필요 시 적정 인력 규모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는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우촌관 내·외부 시설 개선 공사 마무리



▲교수연구실에서 전환된 강의실

우촌관 내·외부 시설 개선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공사는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우촌관 내부 1층 교수연구실이 일반 강의실로 전환됐다. 503호와 504호는 학내 7개의 학장실을 통합한 학장 라운지 2실로 재구성됐다.

외부는 벽을 덮고 있던 수직 루버*가 제거됐다. 수직 루버 철거는



▲5층에 조성된 학장 라운지

지난 14일 완료됐으며 1층과 5층 내부 공사는 지난 17일 완공됐다.

정도영(자산관리팀) 부팀장은 학장 라운지 조성 후 남은 학장실은 교육중점 교원 연구실로 사용된다"며 "이번 공사를 통해 캠퍼스 공간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수직 루버: 길고 좁은 판을 창문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환기 조절 장치

유가는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상상력교양대학 포럼 오는 17일 개최 예정

'제12회 상상력교양대학 포럼'이 오는 17일 연구관 1층 C&C 멀티스튜디오에서 개최된다. 교육의 흐름, 환경 변화 이슈에 대해 외부인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상상력교양연구소에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다. 참여 대상은 한성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이다.

이번 포럼은 AI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내 구성원과 함께 글쓰기와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지윤(상상교양연구소) 교수는 "AI 교육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끼리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해진 주제를 두고 참여 학생과 교직원이 강연자와 논의하는 방식

으로 포럼은 진행된다.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읽기와 쓰기: 생성과 요약이 놓치는 것에 관하여'로 제시됐다.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쓰기를 어떻게 바꿀까」의 저자이자 문해력 연구자인 김성우(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초청돼 인공지능 시대의 읽기와 쓰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포럼은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재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된다.

윤 교수는 "포럼을 통해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발전 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AI 시대의 읽기·쓰기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가는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26학년 하반기 한성대 ROTC 모집

모집 기간: 8월 31일 ~ 10월 31일

압도적 혜택

-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 원
- 임영훈련비 약 400여만 원
- 품위유지비 매월 28만 원

한성대 단독 지원

- 학점 3.5 이상 전액 장학금
- 여후보생 매학기 100만 원

글로벌 & 리더십 스펙

- 美 텍사스 A&M 대학 리더십 연수
- 국내외 전사적지 탐방
- 24만 동문 네트워크



지붕 아래 권리를 굽히다

“전입신고 안 하는 대신 월세는 싸게 받잖아요.” 지난 2월, 월세로 새 집을 얻은 대학생이 임대인에게 들은 말이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되거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의도적으로 막는 사례가 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주소를 신고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새롭게 변경된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는다. 대표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김선주(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전입신고를 막아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지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다방’에서 지난 24일 기준 거래 가능한 서울시 내 오피스텔 월세 매물 1,19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입신고 가능 여부가 표기된 매물 142건 중 ‘전입신고 불가’를 내건 매물 24건을 확인했다.

임대인이 건물의 용도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에게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업무시설로 등록된 경우 전입신고가 제한된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이를 알리지 않고 주거 시설 매물로 안내한다. 규정을 발미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다. 엄정숙(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류상으로는 업무시설, 실제로는 주거시설이라는 이중 상태를 유지해야 임대인의 세제상 이익이 유지돼 전입신고를 막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거주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 배당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의 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 설정되면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엄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은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도 꼽힌다”고 지적했다.

전입신고를 위한 증명 절차가 행정기관마다 달라 임차인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신고 당사자의 신분증만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한성대학교 인근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주민센터 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준비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경 학생은 “숭실대학교 인근 상도1동 주민센터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됐지만 청림동 주민센터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임차인은 실거주지의 지역 정책에서도 원천 배제되는 실정이다.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만 사업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임대인의 강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지역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지만 전입신고를 완료해야만 수혜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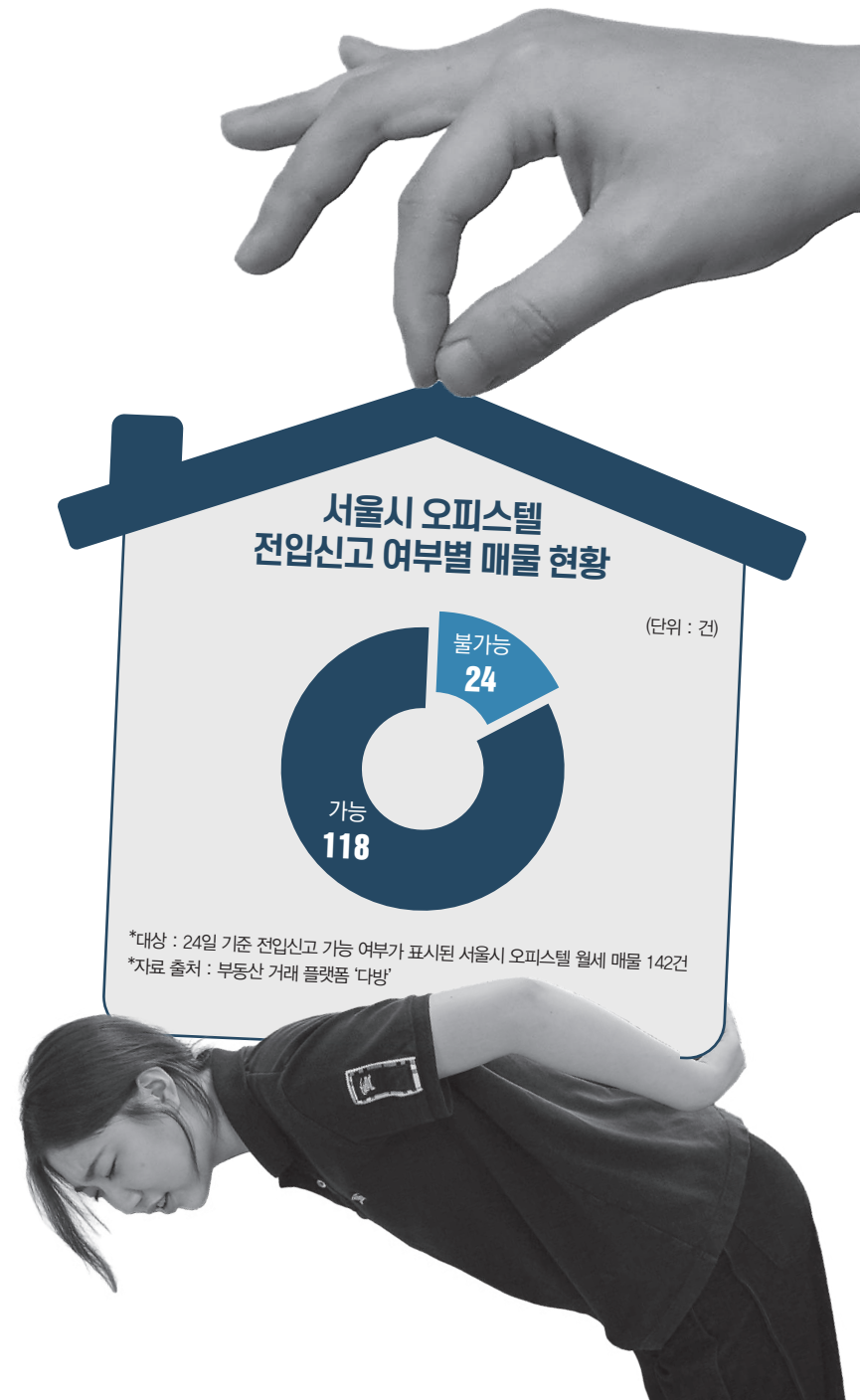
임대인이 건물 용도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배경에는 낮은 세제 부담이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보유한 임대인은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신고하면 세금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거시설에 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준형(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져 임대인이 세금 부담이 적은 용도를 선택할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근저당권'의 효력 발생 시점 간 공백을 악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나타난다. 이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 담보대출 등을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근저당권이 먼저 발생해 배당 순위에서 앞선다. 김 교수는 “대항력의 효력을 다음 날부터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등기와 주민등록이라는 서로 다른 공시제도 간 권리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신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이 복잡한 신고 절차의 원인이 된다.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재량 심사를 통해 수리된다. 그러나 상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2조에는 신분증 제시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관리비 고지서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 대표는 “정부에서 배포하는 전입신고 지침 등이 존재하지만 원칙적 권고에 그쳐 개별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행정기관이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임차인이 지역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 행정기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비대면으로 서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임차인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교수는 “서울에 실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돼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전 건물의 용도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임차인은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엄 변호사는 “서류상 업무시설, 실제로는 주거시설이라는 이중 상태를 유지할 때의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법적 다툼의 여지를 떠나 전입신고 불가 매



물은 처음부터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피력했다.

임대인의 추가 담보권 설정을 제한하는 특약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약정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계약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특약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 절차의 확립을 위해 기관별 구비서류와 확인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주거 형태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사전에 유형화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배 대표는 “주거 형태별로 요구 가능한 서류 목록을 사전에 유형화해 담당자의 재량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해 명확한 실거주 파악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비대면 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나 월세 납부 내역 등을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여부가 확인된 임차인에게는 일부 지원 정책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김 교수는 “전입신고가 제한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납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주민등록 사실조사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 조사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김기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황기자의 외교 노트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열풍에 제동이 걸렸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생생형 AI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이다. 미국 정부는 치열하게 설립하려 했으나,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며 대형 IT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둔화할 우려가 발생 중이다. 2008년부터 데이터센터는 지방 정부에게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기대받았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하 AI)이 주목받으면서 데이터센터는 더욱 주목받았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돌입하며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2026년 8월 기준 미국에는 4,767개의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3,969개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갑성(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과 달리 미국 국민의 여론은 데이터센터 건립에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5월 진행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71%가 거주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미국 전역 42개 주, 142곳의 도시에서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한 미주리주 내 패스터스 시의원 4명은 4월 선거에서 낙선하기도 했다. 환형진(한국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연구원) 책임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주민의 반대 의견을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며 “유권자의 요구와 국가적 필요성 사이에 딜레마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지방 정부도 기존에 제공하던 지원과 규제 완화를 다시 축소하고 있다. 뉴욕주는 1년간 데이터센터의 추가 건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시카고시도 같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애리조나주, 일리노이주 등 역시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제공되던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진행 중이다. 황 책임은 “데이터센터는 지역 주민의 전기요금, 환경 오염의 부담으로 관련 규제가 다른 주로 확산할 가능성

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감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인 미국 오하이오주에선 민주당 후보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공화당 후보에게 데이터센터 반대를 내세우며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다. 이유수(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화당 내에선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논리가 격돌 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변화의 배경으로 막대한 전력·물 소비에 따른 물가 상승이 꼽힌다. 데이터센터는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24시간 냉각 설비를 가동해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에 따른 비용이 전기·수도 요금에 반영돼 주민의 부담이 증가한다. 김 교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일반 주민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 반대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생활환경 역시 소음으로 악화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팬을 가동할 때 심한 소

음을 동반한다.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주의 데이터센터는 기차가 바로 옆을 지나는 수준인 약 105dB의 소음이 발생한다. 위스콘신주의 도시 스티터번트의 주민은 소음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책임은 “사용자와의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도시 가까이 데이터센터를 배치하게 된다”고 전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방 정부가 투입하는 금액과 부지에 비해 창출하는 일자리가 적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일례로 인디애나주에 건립된 메타의 데이터센터는 완공 후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한화로 약 457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하나를 창출해 낸 것과 같은 수준이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과 AI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이유수 교수는 “미국 정부의 기조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혼란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은 데이터센터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된다. 데이터센터 건립 지연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발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유수 교수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은 한국산 반도체의 주문량 감소나 납품 연기로 이어져 단기 실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려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삼성중공업은 바다 위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부유식 데이터센터’의 설계 계약을 진행했다. 이는 전력, 용수, 부지 확보로 지연될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과 LG는 물 소비량이 적은 액체 냉각 기술 개발에도 나섰다. 이유수 교수는 “기존의 공랭 냉각 방식을 벗어나 액체 냉각방식을 도입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개념 10분 요약’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이다. 대학생이 됐으면 경제개발 상식 정도는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까다로운 경제 용어가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경제주체로서 현명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나아가 경제 원리를 사회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가뭄’이 찾아왔다. 정부가 세 차례의 유예 끝에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층이 늘어난 가운데 소액 투자자에게도 같은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자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알아봤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가상자산에 던진 조세 제도의 숙제

조세 굴리는 효율의 톱니바퀴

조세란 정부가 사회 전반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주체로부터 거두는 재원이다. 정부는 경제주체가 납세한 자원을 확보해 사회에 복지·교통·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경제주체가 직접 마련하기 어려운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정부가 이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에서 조세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는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행정 기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조세는 조세의 부담이 납세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소득세처럼 납세의 무지와 실제 조세 부담자가 동일한 조세를 의미한다. 반대로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뜻한다. 정부는 조세의 목적과 과세 대상,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세와 간접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이은경(이음세무노무컨설팅) 대표는 “이러한 차이는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도 중요하다”며 “현실에서 직접세는 조세 부담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반면 간접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돼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주체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규모에 따라 노동·소비·투자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변화시킨다. 이를 조세의 경제적 유인이라고 하며, 경제주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조세의 특징을 일컫는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경제주체는 세금으로 인한 비용 변화를 고려해 소비나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을 조절한다.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변화는 사회 전반의 경제 변화로 이어진다. 이 대표는 “경제주체는 의사결정할 때 세액을 포함한 세전 비용과 세후 수익을 고려한다”며 “세금을 통한 비용 변화에 따라 경제적 행동도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세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조세를 낮추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해 조세를 부과해 경제주체가 사회의 전체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세제도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율성을 조정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대표는 “환경오염 등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관련 활동에 세금을 부과해 경제주체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정책은 경제의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적 후생이란 사회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과 편익의 총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주체는 최저 노동·소비·투자 수준에서 이탈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세수입보다 이탈하는 손실이 더 커지면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진다.

이탈로 인한 손실은 특정 경제주체에게 이전되지 않고 시장에서 사라진다. 이를 ‘사중손실’이라 말한다. 쉽게 말해

본래 성사될 거래가 세금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을 편익은 물론, 정부가 거둘 수 있었던 세수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자는 노동의 추가적인 보상이 줄어든다고 판단해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이탈은 세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이 오를수록 더욱 가파르게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로 인한 사회적 후생 변화는 경제주체가 경제 요인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정도를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라 한다.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나 공급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뉘 계산한다. 단위탄력적이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율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가격 변화에 비해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큰 탄력적 상태이고, 1보다 작으면 변화가 작은 비탄력적 상태이며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일반적으로 수요나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동일한 세율이라도 거래량과 사회적 후생이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성은 조세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최적조세이론’에도 적용된다. 최적조세이론은 조세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조세 수준을 찾는 이론이다. 주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는 높은 세율을, 탄력적인 재화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일례로 생필품은 소비량을 줄이기 어려워 수요가 비탄력적인 반면, 사치품은 소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필품에 높은 세율을, 사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줄일 수 있다. 이 대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기에 조세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술포했다.

정부는 조세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왜곡하지 않는 ‘균형’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책적 목적과 조세의 본래 기능 사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교수는 “정책 수단으로 조세를 남용하게 되면 조세 본래의 기능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과 과세의 엇박자

정부가 세 차례의 유예 끝에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두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준비 부족 과세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유석(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과세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도입과정에서 소액 투자자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투자 규모에 따른 기본공제 활용도의 차이로 인해서다. 기본공제는 일정 한계점까지의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이때 청년 등의 소액 투자자는 투자 규모가 작아 큰 수익을 얻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소액 규모인 250만 원 초과 이익부터 과세돼 투자 규모에 비해 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이러한 차이로 소액 투자자가 대규모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는 투자자도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 연도별 투자성과의 낙폭이 크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에는 주식과 달리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이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전체 투자성과에 비해 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강민정(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특정 연도의 이익보다는 일정 기간의 손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제 투자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 준비 과정에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목된다.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어 정부가 거래 내역과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취득한 지 오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점이 유예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액 투자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원인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가상자산은 실제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 도입 당시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돼 기타소득으로 분류

됐다. 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 형태로 이뤄질 경우 가격 변동성도 크다”며 “기타소득의 과세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원인으로 기타소득의 과세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손실 이월공제란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이후 발생한 소득에서 조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기타소득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가상자산도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월공제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과세체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담한 비용이 과세소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증빙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필요경비란 세금을 매길 때 총수입에서 제하는 사업 및 활동비용을 뜻한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일정한 부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특히 해외 거래소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증빙과 산정이 어렵다. 이에 실제 투자자가 지출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충분히 차감하기에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가상자산의 부대적인 수수료나 매입 비용,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고 말했다.

소액 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수준을 조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 유사한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립한 뒤 소득 규모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인 셈이다. 강 교수는 “소득분류 변경뿐만 아니라 기본공제와 손실 이월, 납세자의 신고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장기적인 실제 손익을 과세에 반영하기 위해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 연도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손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실을 일정 기간 이월해 이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 장기간의 실제 투자성과에 보다 근접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정 교수는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월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제 순이익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증빙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다. 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나 대여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거래 수수료와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실제 투자자가 얻은 순이익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답했다.

*개인 지갑 :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가상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

양소희

편을 가르는 모습은 우리에게 일상이 됐다. 정치, 성별, 세대 등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편이나”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곤 한다. 나와 다른 시선을 마주할 때면 혈안이 돼 분노하고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혐오 포화 상태다. 이러한 포화 속에서 성숙한 공론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유난무브먼트’의 양소희(30) 대표다. 갈등을 극복하고 비난보다 이해를 추구하는 그는 ‘단절된 사회’가 아닌 ‘소통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양 대표가 추구하는 소통은 어떤 모습일까. 단절된 사회 속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그가 꿈꾸는 사회를 들여다보자.

김기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무관심한 세상에 균열을 내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다

양 대표가 본격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한 순간은 청소년기였다. 전국 도시별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고향인 제주도 대표로 선정돼 서울을 방문한 그는 수도권 출생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경험의 차이를 체감했다. 제주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인프라를 서울에서는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멀게만 느껴졌던 ‘불평등’의 개념이 자신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아가 새로운 세상에도 눈을 뜨는 계기로 작용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활동을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은 매주 대중교통을 이용해 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어요. 제주도에서는 전혀 모르던 세계였기 때문이었죠. 출생지가 사람의 한계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경험의 차이를 체감한 양 대표는 문화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보 공유 창구를 개설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블로그였다. 서울에서 만난 인연을 통해 들려오는 각종 행사 및 공모전 소식을 블로그를 통해 전달하며 비수도권 친구들은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리고자 했다.

“금전적인 목적보다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이 용자로부터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얻는 데 있어서 제 정보가 중요한 자료였다는 말을 들으면 동기부여가 됐죠. 제가 남겨둔 기록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동기부여가 쌓여 블로그 활동을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었어요.”

양 대표는 블로그에서 더 나아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는 고향인 제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 여행 장학 사업’을 진행했다. 꿈 여행 장학 사업은 청소년에게 서울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고향을 바라보며 제주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한다.

“제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장학 사업은 이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장학 사업은 없었죠. 그래서 여행 비용을 전액 지원해 서울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을 희망했어요. 제주도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을 경험하면서 당연히 받게 받았었던 것들을 질문하기 바랐죠.”

각자도생에서 변화의 공동체로

블로그 활동을 이어가던 양 대표는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상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블로그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벗어나 오프라인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추구했다. 그와 같은 뜻을 공유하던 블로그 독자들과 함께 그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유난무브먼트’의 첫걸음이였다.

“블로그 독자분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이분들이 블로그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만 활동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화 모임을 만들어보고자 블로그 가입자 100분께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중에 40분께서 관심을 표하면서 대화 자리에 참석하셨죠.”

2024년 9월 유난무브먼트가 공식 설립됐다. 양 대표는 ‘각자도생이 우리의 시대정신일 수는 없으니까’를 유난무브먼트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청년들을 각자도생하며 이기적인 세대로 치부하는 사회적 시선을 뒤집고자 하는 양 대표의 바람이었다.

“유난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사전적 의미는 ‘남들보다 특별한 데가 있음’이에요. 사회적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난스러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난무브먼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청년 세대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사회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죠.”

유난무브먼트는 그동안 없었던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정치 갈등이 심화되자, 청년 세대를 위한 말하기 장의 필요성을 깨달은 양 대표는 ‘나라걱정부’ 프로젝트를 고안했다. 청년들이 모여 현 시국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다른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 나갔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공격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는 힘을 기르는 거죠. 뜻이 맞지 않는 상대와의 대화를 결정한다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대화 경험을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어요.”

양 대표는 사회적 담론으로도 눈길을 돌렸다. 그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반복해서 겪은 청년 세대였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복된 사고로 또래 친구들을 잃고 무력감과 분노를 느낀 그는 서로를 위로하고 트라우마를 달래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당시 참사를 목격한 이들이 그 기억을 갖고 1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다뤘다.

“유난스러움이 세상의 표정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사진 : 황수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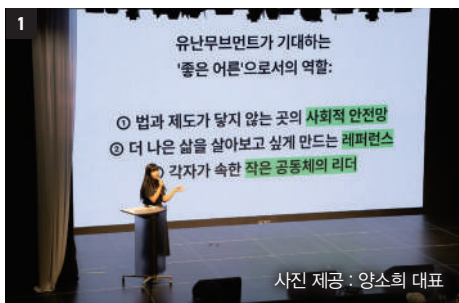


사진 제공 : 양소희 대표



사진 제공 : 양소희 대표

- 1 양소희 대표가 ‘살롱, 창덕궁’ 시리즈에서 강연 중이다.
2 유난무브먼트 창립총회 참여자들과 촬영하는 양소희 대표

“사고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무너지거나 무력해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메시지 전달의 필요성을 느꼈죠. 대형 참사를 접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사랑과 낙관’은 결국 돌아온다

양 대표가 유난무브먼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낙관’이라고 말한다. 서로의 대화와 믿음으로 해나가는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는 활동이다 보니 더 나은 삶을 바라며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사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활동의 본질은 미움과 파괴보다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되새기고 있죠. 낙관은 유난무브먼트의 직업 윤리에도 같아요.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출발할 수 없어요.”

또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난무브먼트를 찾는 이유로 어떤 주제로도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모름과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양질의 대화를 하기 위해 고민한다.

“유난무브먼트의 사훈 1번이 ‘노잼필패’예요.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 조심심이 커지지만, 유쾌하고 재밌게 그 주제를 건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해당 주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재밌어 보여서 왔다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모임을 찾아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크죠.”

여러 대화의 장을 마련했던 양 대표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 말이다. 값진 대화를 경험한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청년이 갖는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패를 교정할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한다.

“온라인에서 하는 정치적 대화는 대화가 아닌 배설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정치 대화는 본인과의 타인의 관점 차이를 이해하고 타협하는 방안이에요.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대화를 경험한 시민이 전체 구성원의 3~40%가 된다면 청년이 기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어요.”

양 대표는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할까. 그는 성별이나 나이, 정치 등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건설적인 대화를 꿈꾼다. 나아가 현재 청년층만 국한된 모임의 참여 연령대를 높여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평소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에 대해 아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시대를 경험했던 중장년층 세대와의 교류도 고민하고 있어요. 같은 나라 국민이지만 선진국만 경험한 청년세대와 독재, 민주화 운동 등을 경험한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경험과 지혜를 교류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만큼 그는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기술과 자본이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 민주주의가 지닌 힘은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속의와 포용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그 제도에 직접 뛰어드는 시민들을 돕는다.

“사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포기하기 너무 좋은 사회로 가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 한 명이 빠르게 결정하면 되는 상황에서 왜 소수를 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간이 나아갈 수 있던 건 민주주의를 통해 토론과 속의가 활성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믿음 없이 지속될 수 없는 제도예요. 오류가 있더라도 인간 스스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믿는 수단이거든요.”

양 대표는 AI가 발전함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창작의 과정에서 필요한 고민을 AI를 통해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책임과 판단의 영역까지 침범해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판단을 AI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심지어 각자 접하는 정보 환경도 다르죠.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적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접하는 환경이 개별화되다 보니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어려워져요. 이러한 요소가 청년 세대가 성장하고 자리 잡는 데 방해 요인이 되고, 그 핵심이 AI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양 대표는 청년 세대가 건강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특징과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먼저 존중해야 하며, 그 첫걸음이 소통이라는 전언이다.

“타인의 고통과 불행은 ‘남의 일’로 여기는 경향이 커져서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순환해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타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본다면 나중에 본인의 생각도 존중받을 순간이 올 거예요.”

ETF, 시장을 움직이는 투자의 열기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바로 '상장지수펀드(이하 ETF)'다. 지난 8월 4일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7월 한 달 동안 약 78조 원 감소하며 500조 원 아래로 내려갔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사상 최대 규모로 몸집을 키웠던 ETF 시장이 증시 급락과 함께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ETF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ETF는 단순히 여러 종목을 담은 금융상품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변동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나로 움직이는 여러 자산

ETF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인 펀드는 투자자가 돈을 맡기면 운용사가 여러 자산에 대신 투자한다. 이후 투자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수하거나 환매한다. 반면 ETF는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수·매도할 수 있는 펀드다.

ETF 1주를 매수하면 여러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로 인해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매수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 상위 200개의 상장사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다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일부 상쇄해 특정 종목에 투자금이 집중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강민욱(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ETF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섞어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개별 기업이 가진 위험을 여러 자산에 나눠 보유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TF를 이해하려면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익혀야 한다. 순자산가치는 ETF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 모든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와 비용 등을 제외한 뒤 총 발행 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ETF 1주의 이론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ETF의 시장가격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투자자의 매수·매도와 거래량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김채현(국립경국대학교 디지털금융학과) 교수는 "시장가격은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바탕으로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투자자의 매수·매도 수급에 따라 순간적인 간극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기초지수는 ETF가 따라가도록 설계된 주식·채권 등의 가격 움직임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기준이다. ETF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변하고 수익률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을 기초지수로 삼는 ETF가 있다. 이 ETF의 가치는 코스피 200에 포함된 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변한다. 강 교수는 "ETF는 시장을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순자산가치가 변하면 ETF의 시장가격도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두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다시 조정된다. 기초지수가 상승하면 ETF가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높아지면서 ETF의 시장가격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반대로 기초지수가 하락하면, 보유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고 순자산가치가 낮아지면서 ETF 시장가격 역시 하락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김규현(예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가격이 변하면 ETF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이 변하고,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시장가격 역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바탕으로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수익과 위험 사이를 오가다

ETF의 투자 수익은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른 보유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ETF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 등의 분배금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시세차익은 ETF를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이이다. 반면 분배금은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ETF의 수익은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지만, 수익률이 기초지수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ETF의 수익률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추적오차'라고 한다. 추적오차는 ETF의 운용보수와 거래비용, 기초자산의 배당금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이가 누적되며 발생한다. 강 교수는 "ETF는 정해진 비율대로 자산을 매입해야 하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확히 같은 비율로 매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TF의 실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가 커질 경우 ETF가 보유한 자산의 움직임과 실제 수익률이 달라지곤 한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2배 또는 3배로 책정하도록 설계돼 기초지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모두 확대되는 구조다. 따라서 ETF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인 분산투자 효과와 보다 큰 가격 변동 위험도 병존한다. 김채현 교수는 "레버리지 ETF는 선물이나 스왑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해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 또는 3배 수준으로 증폭시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파동을 일으키다

ETF의 규모가 커지면 기초지수에 맞춰 투자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량이 늘어난다. ETF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맞춰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상품 규모가 확대될수록 목표한 투자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산을 사고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ETF의 거래가 기초자산의 매수·매도 수요로 이어지면서 해당 자산의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긴다. 김채현 교수는 "ETF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률 유지를 위한 거래량이 급증한다"며 "장 마감 직전 등 특정 시점에 대규모 매매가 집중되면 단기적인 수급 충격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락장에서 ETF의 순자산이 감소하면 운용 주체가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 ETF를 판매하면서 기초지수의 하락을 확대하는 '숏 감마' 현상이 나타난다. 숏 감마는 기초지수가 오르면 매수하고 내리면 매도하는 대응 방식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을 더 크게 만든다. 하락장에서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져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다. 이는 결국 해당 상장사의 주가 하락의 결과를 낳는다. 김규현 교수는 "ETF의 거래 충격은 차이거래 경로를 통해 기초자산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이된다"며 "하락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매도 흐름이 기초주식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의 '군집행동'과 '손실 회피 성향' 등 투자 심리 역시 ETF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군집행동은 다른 투자자들의 행동을 따라 비슷한 종목을 동시에 사고파는 투자 행태다. 손실 회피 성향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더 크게 받아들여 손실을 피하려는 성향을 뜻한다. 투자자는 상승하는 ETF를 따라 급매도에 나설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의 같은 방향의 주문이 집중되면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강 교수는 "개인투자자가 주변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레버리지 ETF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은 군집행동과 결합할 경우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TF는 투자 대상과 상품 구조가 다양해지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ETF는 투자자의 자산 운용을 넘어 국내 증시의 주요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채현 교수는 "시장이 건전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투자자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펀드 :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대신 투자한 뒤 그 이익이나 손실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간접 투자 상품

**코스피200 : 코스피 상장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우량기업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주가지수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도돌이표에 갇힌 학생자치

지난 9일 학생자치기구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올해 감사에서는 주의 29건, 경고 11건이 집계되며 총 13개 트랙·학과(부) 학생회가 징계 대상이었다. 이례적으로 수치가 치솟았던 지난해의 주의 85건, 경고 3건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주의 15회에 경고 0건이었던 이전의 흐름까지 함께 돌아보면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결과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중앙감사위원회는 학기 초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 지침 숙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단위별 학생회 역시 행사 등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감사 관리 주체인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전체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 2학기 사업 시작 전 감사 OT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학생회와 감사 관리 주체가 차후 감사에서 교육 활성화와 체계 정비를 약속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올해 감사 결과는 그 약속이 아직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가 매년 같은 잘못을 찾아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사는 운영이 투명성을 점검하고 바로잡아 다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감사 관리 주체와 학생회 모두 지난 경험을 되짚어봐야 한다.

감사가 이뤄지는 체계와 과정부터 짚어야 할 시점이다.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감사시행세칙은 '2024학년도 하반기 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개정된 바 있다. 기존에는 경고 1회 시 해당 항목의 학생회비 전액을 환불했으나 경고 2회부터는 1%를 환불하고 이후 경고가 1회 늘어날 때마다 환불액을 2%씩 늘리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책임을 완화된 만큼 교육으로 보완했어야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일부 학생회장은 감사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한 차례에 그쳤다고 답했다. 심지어 재선거 단위에서는 감사 OT조차 진행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운영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다양한 사업과 공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복잡한 회계·감사 기준까지 모두 숙지해 실수를 피하기란 쉽지 않을 테다. 그러나 학생회는 학생들이 납부한 회비를 집행하고 학생들을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실수가 발생했다면 이를 개인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 학생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남기는 것 역시 책임이다.

지난해 개선을 이야기했다면 올해는 그 결과를 보여줄 차례다. 단위별 학생회는 한 해의 시행착오를 다음 학생회의 밑거름으로 전하고 총대는 매년의 감사가 교본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감사가 매년 잘못을 세는 일이 아니라, 학생자치가 한 걸음씩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 학생자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는 각 주체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때다.

김혜윤 편집국장



기자수첩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주택난의 해법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청년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청년 주거난이 해소될 것처럼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가 청년 주거난 해소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내세우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만 6천 가구가량의 청년안심주택이 공급됐다. 2025년 8월에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기존 8%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꾸준히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돼 왔음에도 정부의 해법은 다시금 '주택 공급'으로 수렴하고 있다.

방을 채우기 전에

물량 공세가 가장 손쉬운 해법인 탓일까. 청년의 소득 수준과 주거비 부담,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까지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무수히 늘어난다. 반면 주택 공급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공급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장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주택 공급 수로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정작 청년의 주거 환경은 도외시되고 있다. 청년이 주거지를 옮긴 후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전입신고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사례가 확인됐다. 당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

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받는 현실은 청년 주거 환경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며 삶을 꾸려가는 기반인 동시에,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청년 주거 환경의 토대부터 점검하고, 청년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청년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이제는 '살' 집을 늘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때다.

유기은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기자사령

임	면	퇴
편집국장 김혜윤(사회과학 2)	편집국장 이승희(사회과학 4)	부편집국장 임지민(사회과학 2)
부편집국장 황수민(상상력 1)		정기자 조수현(인문 2)
		금세현(상상력 1)

동정란

석유나(미래플러스대학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석 교수는 7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아프리카 갤러리에서 개인전 <TRIUMPH>를 개최했다.

정경희(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교수
정 교수는 지난 2월 27일 학술서 '학술 커뮤니케이션: 지식 생산과 공유'를 출간했으며, 해당 저서는 7월 20일 '202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낙산에 올라

대학은 수많은 모서리가 부딪히는 거대한 연마기(研磨機)와 같다.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 각기 다른 날을 세운 채 만난 우리들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필연적으로 서로의 삶에 생채기를 내곤 한다.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소모'라고 부르며 아파하지만, 졸업을 앞둔 내가 바라보는 마찰의 흔적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서로를 깎아내며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안을 수 있는 '동근 원'이 돼가는 중이다.

"우리는 서로의 모서리를 깎아내며 비로소 동근 원이 되었다" 나는 이 문장을 보며 디자인 작업으로 수없이 다듬었던 오브제들을 떠올렸다. 날카로운 직선은 명확해 보이지만 때론 위태롭고 차갑다. 반면, 수만 번의 손질을 거쳐 부드럽게 마모된 곡선은

마모되며 완성되는 삶의 미학

보는 이에게 안정감을 준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각자의 고집과 편견이라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내세우지만, 함께 과제를 하고 밤을 지새우며 고민을 나누는 사이 뾰족함은 서서히 마모된다.

이 마모의 과정은 결코 고통스럽기만 한 손실이 아니다. 모서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유연함이 깃들고, 그 빈틈으로는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대신 둥글게 맞물려 함께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대학 생활이 주는 진정한 성숙이다. 지우개가 몸을 깎아 문장을 정돈하고 연필심이 닳으며 선을 그려내듯, 우리도 스스로의 일부를 내어줄으로써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변모한다.

곧 우리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더 거친 세상이라는 연마기 속으로 던져질 것

이다. 그곳엔 지금보다 더 예기치 못한 마찰이 기다리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것은 깎여나가는 아픔 뒤에 오는 부드러운 단단함이기 때문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 세웠던 날카로운 각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을 더 깊게 포용할 수 있는 원이 된다.

마모된다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는 정교한 작업이다. 그러니 지금 삶의 현장에서 깎여나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스스로를 다독여주자. 당신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만든 동근 마음들이 세상의 거친 틈새를 메우는 다정한 온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송이(서양화 4)

의화정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과연 AI의 주인인가

최근 한 협회로부터 'AI 활용을 통한 프로젝트 관리와 미래' 발표를 요청받았다. 그동안 프로젝트 관리의 주체는 언제나 '인간'이었다. 이 오래된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AI가 등장한 이후로 사람만 관리하던 시대에서, AI를 함께 관리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1926년 생리학자 월터 캐넌은 '항상성(homeostasis)'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생체계가 내부 상태를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동일함'의 homo가 아니라 '비슷함'의 homeo를 골랐다는 점이다. 아마 항상성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조정으로 유지되는 안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간트 차트, CPM, PERT는 사람을 예측하기 위

한 문법이었으나, 에이전트AI의 확산으로 생산성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AI 없이는 일을 못 하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진술이 섞여 있다. 하나는 실행의 의존이고, 또 하나는 판단의 의존이다. 문제는 판단의 의존, AI가 틀렸을 때 틀렸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다. 흔히 사람이 단계마다 승인하는human-in-the-loop을 안전 장치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이클의 내부에 있다. 그렇다면 실행은 위임하고 사람은 위에서 감독하는 human-on-the-loop은 답이 될까? 에이전트가 초단위로 일하는 시대에 하루 삼백 건의 결재가 올라오면, 어느 순간 내용을 보지 않고 도장만 찍게 된다. 그 순간 승인은 통제가 아니라 요식이 된다.

다시 향상성으로 돌아가면 조절 시스템은 기준값 설정, 이탈 감지, 조정 실행으로 이루어진다. 실행의 위임은 생명체가 늘 해온 일이고, 주인과 부품을 가르는 것은 나머지 둘이다. AI가 기준을 정하고 이탈을 감지하며 인간은 승인만 한다면, 그는 조절자가 아니라 말단 기관, 곧 부품이다.

캐넌이 homo가 아니라 homeo를 고른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고, 같을 필요도 없다. 다만 좋은 결과를 스스로 정의하고 여운을 알아보는 능력만은 지켜야 한다. 이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AI의 주인이고, 잃는 순간 루프 위에 있어도 부품이 된다. 우리는 과연 AI의 주인인가? 이 질문은 자신의 판단 능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묻는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다.

전준현(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익숙함에 균열을 내는 시선

한성대신문사
제61기 수습기자 모집

2026. 8. 10. ~ 9. 4.

